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22 .

발 의 자 : 박성민 · 金炳旭 · 김승수
김용판 · 노용호 · 이명수
이채익 · 이현승 · 전주혜
하영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, 시·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(중앙대책본부장)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에게도 재난사태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도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6조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

제36조제1항 본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”으로, “중앙위원회”를 “중앙위원회 또는 시·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행정안전부장관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1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

한 재난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제36조(재난사태 선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36조(재난사태 선포)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-----

-----중앙위원회
또는 시·도위원회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

<p>③ (생 략)</p> <p>④ <u>행정안전부장관은</u>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<u>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-	--